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 형사부

결 정

사 건 2025초기619 구속취소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피 고 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청 구 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조대현, 정상명, 김홍일, 송해은, 송진호,
김계리, 이동찬, 오욱환,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주 문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2025. 1. 15. 10:33경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된 후인 2025. 1. 17. 17:4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위 일시경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2025. 1. 19. 02:53경 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과 함께 수사처에 반환되었다.

나. 검사는 2025. 1. 23.경 수사처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아 2025. 1. 26. 18:5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수사 관계 서류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위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관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과 불구속수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의 취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인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동안은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구속기간을 확보하여 수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로 법원에 있었던 기간보다 길어지는 불합리가 생기게 되어 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로 인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다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법원이 7월 1일 오후 2시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다음 날인 7월 2일 오후 1시에 이를 검찰청에 반환하였다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있었던 기간은 23시간임에도 2일(48시간)의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다) 게다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법원의 접수 및 반환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접수 및 반환 시간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설령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권리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앞서 든 예를 7월 1일 00시에 접수하여 같은 날 23시에 반환한 경우와 비교해보면, 실제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있었던 기간은 똑같이 23시간이지만, 앞서 든

예에서는 2일이, 위의 예에서는 1일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 한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는 달리 필요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임에도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 즉 날이 아닌 시간만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을 해석할 때에도 불산입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로 법원에 있었던 기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마)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 등에 큰 부담을 주거나 구속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즉 늘어나는 구속기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었던 기간인 약 33시간 7분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존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인 2025. 1. 24. 24:00에서 약 33시간 7분이 연장된 2025. 1. 26. 09:07경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5. 1. 26. 18:52경 여전히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2025. 1. 16. 14:03경 위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체포적부심사가 이루어진 후인 2025. 1. 17. 00:35경 수사처에 반환되었는바,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약 10시간 32분의 시간 역시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룬다.

그러나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그만큼 늘어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규정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구금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문언에 따른 그와 같은 해석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엄격한 해석으로 보인다.

③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각기 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

는다고 하여,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임이 명확하게 규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후단)와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확보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수사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나, 수사의 편의를 앞세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를 함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수사처의 수사, 특히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

나)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

2) 구체적 판단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3. 결론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7.

재판장	판사	지	귀	연
	판사	김	의	담
	판사	유	영	상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